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과 과제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Policy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head

김은하 | 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한 정책 지원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보 활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 연계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급여 관리로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다. 둘째, (과거)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잠재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위기 대상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정보와 외부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정보통계지원시스템(Data Warehouse)을 통해 사업 현황과 수급자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현황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에서 더 나아가 근거 기반 정책 의사 결정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자체에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함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31개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 지원 시스템 중 복지 분야 정보를 별도로 통합·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2010년 개통 이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 사이에 복지 대상자와 예산, 사업 수는 점차 확장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17년에 복지 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였고, 복지 예산은 2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3.8배 증가하였으며, 복지 사업 수도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 증

가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 영역의 규모 확장은 곧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 자료가 방대한 규모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책 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더 나은 정책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본 기능은 복지 대상자의 복지 이력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기능 이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수행한 정책 지원의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정책 지원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 현황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의 복지 급여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행복e음’과 범정부

의 복지사업 및 자격·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한다.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 즉 수급 이력 정보, 소득과 재산 정보, 가구 및 개인 인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급자에게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는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급여가 전달되도록 지원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는 <표 1>과 같다. 주된 정보는 급여 현황 정보, 대상자 인적 사항 정보, 수급 이력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정보, 보조금 수급 이력 정보 등이다. 이상의 정보는 활용 범위가 복지업무 처리 과정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회보장정보

표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보장 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 관리에 필요한 인적 사항·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상담, 신청,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 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 관련 민간·법인·단체·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자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2018. 12. 11. 일부개정). 제23조 제1항.

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정보는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 현황

대상자 관리의 복지업무 처리 과정 이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가 활용되는 영역은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적정 급여 관리,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 고위험 대상자 정보 제공, 복지정보통계시스템(Data Warehouse) 지원이다.

1) 적정 급여 관리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 확인 조사가 실시된다. 2010년에 처음 추진된 확인 조사는 현재 수급 상태인 복지 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타당한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등 24개 공공기관의 소득 및 재산 자료 79종을 활용해 수급자의 자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가 타당한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실시된다(월별 확인 조사는 연 6회 실시).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

연금 등 13개 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이다.

조사 결과 재계산된 급여액이 적정하지 않으면 해당 수급자에 대해 보장 중지나 비용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나,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확인 조사로 2017년 까지 누적된 재정 절감액은 약 4조 원에 이른다(한은희, 2017).

2)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

‘적정 급여 관리’는 수급 중인 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보장 중지나 비용 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것인 반면,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은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예산 절감에, 후자는 복지 대상자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한다.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에는 추가 서비스 지원,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에는 서비스 안내, 연령 도래자 대상 서비스 안내, 출생자 대상 안내 서비스, 신

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 영역

영역 구분	활용 정보	정책 효과
적정 급여 관리	소득·재산 연계 정보	재정 절감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	(과거) 수급자 관련 정보	수급 누락자 발굴
고위험 대상자 정보 제공	수급자 관련 정보, 공공기관 연계 정보	위기 대상자 선제적 개입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지원	수급자 관련 정보	정책 현황 참고 자료 제공

설·변경 제도 수급 가능자 대상 서비스 지원,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가 있다.

(1) 수급자 대상

첫째, 수급자 대상 추가 서비스 지원은 일부 급여는 이미 수급 상태이지만 타 급여는 비수급 상태인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타 급여가 수급 가능하면 해당 급여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김은하, 이인수, 2016). 즉, 현재 수급 상태인 개인이나 가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추가로 수급 가능한 다른 서비스를 찾아 준다.

중증 장애인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한부모 가족 대상 서비스의 수급자는 아동 양육비나 학용품비 지원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제도 간 관계와 수급자의 급여 정보, 인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지점에 착안하여 대상자를 찾아 수급 확률이 높은 서비스를 안내한다.

그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통해 지원했

던 추가 서비스 목록은 <표 3>과 같다.

둘째는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 요금, TV 수신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면 대상자 중에는 사정이 있어 신청을 못 하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는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 정보와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연계한다. 연계한 자료를 분석해 요금 감면 지원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찾아낸다. 이 정보를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각 기관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다.

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는 2015년부터 매년 1회, 2017년부터는 매년 2회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

표 3. 추가 서비스 지원 목록

수급 서비스	추가 서비스	수급 서비스	추가 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계속)	에너지바우처
	보육/양육수당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	추가 아동 양육비
	장애인연금		학용품비 지원
	장애수당	기초연금 수급자	보육·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3급 복합장애 대상자	장애인연금
주민세 감면	장애인연금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pp. 40-41 재구성.

표 4. 서비스 안내 대상 비수급자 목록

구분	추출 대상자 기준
수급 자격 없는 장애인	장애등급이 1~2급이고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2015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3급 복합장애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비수급 상태인 대상자
단전 및 전기료 체납 가구	전기 요금 서비스 신청 가능자
확인 조사로 인한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중 차상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으로 (2015년 7월 이후) 최저생계비 120% 이하, (2016년 1월 이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기초생활보장 탈락자(2010~12년) 중 타 보장의 수혜를 받지 아니하고 탈락 당시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 기준액에 부합하며 확인 조사 기간에 탈락한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탈락자(2010~14년) 중 탈락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150% 이내인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 경험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 장애인면서 소득인정액이 2015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기초연금 탈락자	2014년 기초연금 탈락자 중 탈락 당시 소득인정액이 2015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pp. 40-41 재구성.

지부(2017a)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약 22만 가구, TV 수신료 요금 감면은 약 6만 가구, 전기 요금 감면은 약 13만 가구,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약 21만 명 등 총 62만 가구(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였다.

(2) 비수급자 대상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 노력에서 첫째, 서비스 안내는 현재 시점에 급여 대상자가 아닌 개인이나 가구에 수급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정보를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한다.

서비스 안내 지원은 과거 수급자의 수급 탈락 시점이나 급여 수급 당시의 정보, 혹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수급 상태였으나 현재는 수급 탈락한 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탈락 당시 정보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등록 장애인 정보를 전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를 가려낼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차상위자나 확인 조사 탈락자의 소득 및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통해 제공된 비수급자 대상 안내 서비스 목록은 <표 4>와 같다.

둘째, 연령 도래자 대상 서비스 안내는 수급 가능한 연령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해당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알려준다. 2010년 이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령 도래자에게 안내된 서비스는 총 4가지로 <표 5>와 같다. 대표적인 연령 도래 시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 급여 대상자가 중·고등 학생 자녀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시기, 기초연금을

표 5. 연령 도래자 대상 안내 서비스

보유 자격	연령	대상 서비스
기초생활 수급자	학비 신청 연령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관련 서비스
한부모 수급자	학비 신청 연령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관련 서비스
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만 18세 / 만 21세	장애수당
중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만 18세 / 만 21세	장애인연금
행복e음 복지 주체 등록	만 65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만 65세	기초연금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pp. 40-41 재구성.

표 6. 연령 도래자 대상 안내 서비스 제공 건수

(단위: 천 명)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545	358	374	422	451	463	427	544	506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p. 39 재구성.

받는 만 65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시기 등이다. 연령은 소득·재산과 달리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연령 조건만 필요한 경우 잠재적 수급자를 가려내는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특정 서비스의 연령 도래자 추출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2011년 약 36만 건에서 2018년에 약 51만 건으로 약 41.7%가 증가하였다.

셋째, 출생자 대상 안내 서비스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근거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정보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출생아 정보나, 양육수당과 보육

료를 비수급 중인 영유아 보호자의 정보가 각 지자체에 안내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한다. 보건복지부(2018c)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 수급 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2018년 10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에게 신청을 안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와 재고지가 이루어졌다.

넷째, 신설·변경 제도 수급 가능자 대상 서비스 지원이 있다. 복지제도가 개편되거나 자격 기준이 변경되면 수급 대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신설·변경 제도 수급 가능자 대상 서비스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분석하여 가능성이 높은 대상

표 7. 신설·변경 제도 수급 가능자 대상 지원 서비스

구분	대상자 세부 사항
신청 가능 대상자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제도 개편 후 선정 기준에 따라 1개 보장 이상 신규 수급이 예상되는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추가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수급자 중 신규 제도의 자격 기준 적용 시 중위소득 43%(주거급여) 이하로 추정되는 대상자로서, 제도 개편 이후 선정 기준에 따라 1개 보장 이상 신규 수급이 예상되는 자
차상위 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 안내	차상위계층(한부모, 차상위 본인부담·장애인·자활, 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중 신규 제도 자격 기준 적용 시 중위소득 43%(주거급여) 이하로 추정되는 대상자로서, 제도 개편 이후 선정 기준에 따라 1개 보장 이상 신규 수급이 예상되는 자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pp. 40-41 재구성.

자의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선정 기준에 따라 수급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했던 신설·변경 제도 수급 가능자 지원 서비스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이다. 앞서 소개한 잠재 수급자 정보 제공 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거 시점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제도는 잠재 수급자의 현행화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기한 서비스와 정보의 질에서 차별화된다.

현재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근거한 기초연금 수

급 희망자 이력 관리와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근거한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가 이루어진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수급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 신청 안내를 한다. 신청서 제출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이력 관리가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 이력 관리를 위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¹⁾

3) 고위험 대상자 정보 제공

- (1)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정보 제공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1) 보건복지부(2015, 2017b)는 기초연급에 대해 2015년 선정 기준액 인상(87만 원 → 93만 원, 단독 가구)에 따라 수급 가능한 사람이 약 7만 명, 장애인연급에 대해서는 2016년 대비 2017년 선정 기준액 인상(100만 원 → 119만 원, 단독 가구)에 따라 수급 가능한 사람이 약 1만 7000명 정도라고 추정한 바 있다.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제공은 취약계층이 신청주의의 문제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와 외부 공공기관 정보를 연계한 자료를 분석하고 고위험 통계 모형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지자체에 해당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1월 현재 14개 기관의 정보 27종을 연계한 자료로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여 읍·면·동에 전달하면 상담·조사 후 복지급여·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2018a)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고위험 예상자 30만 명 중 7만 7000여 명(25.6%)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2016년의 20.1%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2) 위기 아동 발굴 및 정보 제공

위기 아동 발굴 및 정보 제공 서비스는 대상이 다를 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고 통계 예측 모형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 안내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안내 방식과 유사하다.

위기 의심 아동 명단 작성을 위해 통계 분석에 활용되는 연계 자료는 장기 결석 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정보, 예방접종 미실시 정보 등 9종의 외부 자료,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정보, 아동복지시설 퇴소 정보 등 5종의 내부 자료, 단전·단수 정보 등 2종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 총 41종의 공적 자료이다(보건복지부, 2018a).

위기 의심 아동 명단은 지자체에 전달되고, 지자체에서는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을 드림스타트와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보건복지부(2018b)에 따르면, 위기 의심 아동 4만 594명 중 행방불명이나 장기 입원 등으로 대상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3만 5043명(86.3%)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30명이 위기 아동 신고 대상으로, 1820명이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4)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지원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은 신속하고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주된 사용자는 지역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정부 부처 사업 담당자, 정보분석가 등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는 복지사업의 현황 통계를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다. 정부 부처 사업 담당자는 전체 복지사업 및 수급자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정보 보호 문제로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 및 수급자 통계에만 접근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통계는 정형 통계와 비정형 통계로 나뉜다. 정형 통계는 복지 대상자의 보장 내용에 따른 수급자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정형 통계 목록을 통해 수급자 현황(인원, 가구원 수, 연령, 성별 등), 수급자 특성(장애 여부, 근로 사항 등), 수급 가구 특성(특례기준별 등), 급여 관련 집행 통계, 소득·재

표 8.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의 다빈도 이용 통계 목록

순위	정형 통계		비정형 통계	
	사업 구분	내용	사업 구분	내용
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총괄 현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개인별 분석
2	복지 대상자	복지 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총괄 현황	복지 대상자	전체 복지 대상자 보장(자격)별 분석
3	장애인복지	장애인 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별 분석
4	복지 대상자	복지 대상자 보장별(자격별) 상세 현황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현황 분석
5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분별 현황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개인별 분석
6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복지 대상자	전체 복지 대상자 신청 분석
7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총괄 현황	사후 관리	환수 현황 분석
8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월별 신청 처리 현황Ⅱ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분석
9	복지 대상자	복지 대상자 사업별 현황(중복 제외)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격 결정 분석
10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지급실적 현황	영유아보육	영유아복지(양육수당) 급여 지급 분석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2019b. 5.). 주요업무통계자료. 내부자료. p. 10 재구성.

산(소득인정액, 재산가액, 부채 등), 부양의무자(유형, 미부양 사유 등), 신청 및 탈락과 관련된 통계 조회가 가능하다.

2019년 5월 기준, 이용자의 활용 빈도가 높은 통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복지 대상자 보장별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 차상위 대상자 현황 등이다.

3. 정책 활용을 위한 과제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는 정책적 활용 가치가 양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효율성 가치의 구현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 절감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욕구 기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구제 혹은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전자는 후자에 필요한 자원 공급의 바탕이 되거나 복지사업 확장을 위한 자원 확대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양 기능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

복지제도의 확장과 발전,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업무 처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상기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 현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은 의사 결정자의 의견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 기반 정책의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행정 데이터는 설문조사와 달리 대상자 전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과 같이 설문조사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행정 처리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이므로, 연구 설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설문조사와 달리 정보 내용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보가 풍부해야 하는데, 행정 데이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최근 행정 데이터 간, 행정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간 연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데이터와 조사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정부 정책 지원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유사한 이유이다.

현재와 같이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수급자를 안내하는 정보 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절적인 데이터를 통합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어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순차적 의문과 과제들이 도출될 것이다. 예방적인 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정보의 연계와 통합이 필수적이다.

나. 지역 맞춤형 정보 공유 확대

정보의 공유나 개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지방자

치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기관 간에 복지 대상자와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사례는 정보 연계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확대,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같은 정책 방향을 볼 때, 앞으로 복지 전달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부상할 것이다. 지역의 복지정책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자체 형편에 따른 자체 사업과 대상자를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보유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공유되지 않아서 별도로 정보를 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지자체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계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리된 틀 내의 정보 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맞게 활용 가능한 유연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를 원한다. 필요 정보에 대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역복지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해당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데이터 품질 관리

정보 이용은 그 정보의 품질이 양호하다는 전

제로 이루어진다. 빅데이터나 데이터 연계의 핵심은 데이터의 양이나 내용이지만, 기본은 데이터의 품질이다.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료 연계나 공유는 무의미하다. 데이터 품질 오류는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책의 사 결정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정책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단계는 품질 관리 정책 수립,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구축 단계 품질 관리, 운영 단계 품질 관리, 활용 단계 품질 관리로 구성된다(이원태, 문정욱, 이삼열, 왕재선, 2016). 각 단계 모두 중요하지만 데이터 구축 시 준수해야 할 데이터 표준 적용, 점검, 데이터 구조 일관성 확보, 데이터 관리 산출물의 품질 확보 등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후 축적되는 데이터의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4. 나가며

개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초기의 불안정한 운영을 극복하고 수급자나 사업의 규모 면에서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유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활용의 두 가지 축은 적정 급여 관리와 고위험 대상자를 포

함한 잠재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대별된다. 정책 효과로 볼 때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락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개통 이래 약 4조 원의 재정 절감을 이루었으며(한은희, 2017), 약 1000만 건의 사례가 수급으로 연결되었다(사회보장정보원, 2019a).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미래를 예견하여 앞서가는 정책 수립, 후속 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 정보의 통합적 활용과 외부 정보와의 연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 복지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의 정책 활용 전제는 데이터 품질이므로 정보가 관리되는 각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은하, 이인수. (2016). 정보시스템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감소방안.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2015. 11. 24.).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한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6. 3. 9.).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4. 4.). 사회취약계층 요금 감면 22만 건 추가 발굴해 지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7. 11.).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도입, 몰라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a. 1. 16.). 단전·단수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7만 7000명 찾아내 지원.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b. 3. 19.).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 요보호아동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통.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8c. 11. 22.).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명이 받았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19. 4. 3.).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2018. 12. 11. 일부개정).
- 사회보장정보원. (2019a. 5.). 주요업무통계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부자료.
- 사회보장정보원. (2019b. 5.). 주요업무통계자료. 내부자료.
- 이원태, 문정옥, 이삼열, 왕재선. (2016). 지속가능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연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은희. (2017).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II: 확인조사. 사회보장정보 브리프 제6호. <http://www.ssis.or.kr/lay1/bbs/S1T758C1129/A/361/list.do>에서 2019. 7. 12. 인출.